

## 한 · EU FTA: 과학기술협력 분야

‘EU Framework Programme 준회원국’과 연관된 구체적인 의제발굴 및 협상전략수립에 관해서

김진숙\*

EU Framework Program은 지난 1984년부터 시작된 유럽 지역의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서 2007년도부터는 제7차 Framework Program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Framework Program은 유럽지역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EU에 의해 기술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Framework Program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Framework Program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사실 크게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공공 및 민간부문에 서 추진되어온 국제 공동연구가 대부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둘째, 유럽 지역에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활동하였던 과학기술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Framework Program 참여 프로젝트의 범위, 참여 주체의 범위, 지적재산권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 권한 등에 존재하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의 차이가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U 회원국이나 준회원국들은 제3국(비회원국)들에 비해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의 범위가 넓으며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다.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한 사업화 권한을 보유하게 되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해진다.

2007년 5월에 개시된 한국과 EU의 FTA 협상을 계기로, Framework Program에 한국이 회원국 대우로 참여할 수 있는

\*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e-mail: mktjskim@snu.ac.kr)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부 부처와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회원국 대우를 통한 Framework Program 참여가 기초·원천기술의 확보, 국내 연구기반의 다원화 및 경쟁력 제고, 유럽 연구기반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EU 시장의 확보라는 다양한 목적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회원국 대우에 의한 한국의 Framework Program 참여에 대해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U-FP 회원국 대우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Framework Program 일반예산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과 유럽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Framework Program 회원국 대우에 대한 주요 이슈를 고찰함으로써 Framework Program 회원국 대우에 대한 당위성과 그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EU Framework Program 회원국 대우에 관한 논점

#### 1) 일반예산 기여

회원국 대우에 의한 한국의 Framework Program 참여에 대해 제기되는 첫 번째 이슈는 Framework Program 참여에 따른 일반예산 기여일 것이다. 사실 회원국의 자격으로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Framework Program의 전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한다. EU의 회원국과 준회원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는 각 국가들의

GDP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즉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 있다. 현재 유럽 지역의 이외의 국가 중 준회원국으로서 EU-FP와 연관되어서 성공적으로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비교하면 한국이 기여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진행된 제6차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하면서 192 M€의 분담금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분담금 규모와 한국과 이스라엘의 GDP 차이를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한국은 연평균 약 3천억 원의 분담금을 제공하고 제7차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해야 한다는 추론에 이르게 된다.

회원국 대우에 의한 한국의 Framework Program 참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각계의 전문가들은 바로 이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일반예산 분담금의 규모가 실질적으로는 매우 중대한 영향을 국내 연구기반에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10조 원에 이르고는 있으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R&D 활동에 투입되는 비율은 5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3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서 염출된다면 이는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큰 타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의 2006년도 예산이 2,840억 원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진흥사업(이공계 분야)의 2006년도 예산이 1,700억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3천억 원을 투입하여 EU의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내 대학의 연구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3천억 원 이상의 R&D 예산을 염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각 부처들이 고유의 연구 사업을 축소하면서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염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설령 과학기술부와 여타의 다른 정부 부처가 분담금을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과 같이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주체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EU Framework Program 회원국 대우 참여에 따른 일반예산 분담금 문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국 대우 추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및 일본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한국의 기술경쟁력 발전과정은 미국 및 일본이 지나온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이들 국가들의 기술경쟁력과 더욱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거나 퇴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는 크게 발전되어 오지 못한 EU와의 과학기술 협력이 EU Framework Program 회원국 대우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강화되어 나간다면, 한국의 과학기술은 보다 다양한 패턴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성을 크게 완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잠재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유럽지역의 네트워크 및 공동연구의 구성

회원국 대우에 의한 한국의 EU Framework Program 참여에 따른 두 번째 이슈는 공동연구팀 구성의 어려움과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럽지역 네트워크의 부재일 것이다.

사실 EU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신청해야 한다. EU Framework Program 회원국 대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3개국 이상으로 구성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유럽 지역에 확고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EU의 연구개발 기반에 대한 한국의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부족은 공동연구팀 구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회원국 대우를 받더라도 프로젝트의 신청이나 수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자 중에서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 인력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대거 참여해야 하는 공동 연구를 주도할 수 없고, 네트워크의 형성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2-3년 안에 한국과 EU간의 네트워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유럽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에 대한 한국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유럽 지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의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EU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회원국 대우에 의한 Framework Program 참여는 한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며, 일단 공동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유럽 지역의 연구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유럽 지역에서 학위를 받거나 연구 활동의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EU간의 공동 연구는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U의 많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들 또한 영어를 사용하여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구사가 가능한 연구자들은 EU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다. 즉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학위를 하거나 연구 활동의 경험을 보유한 연구자들도 공동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네트워크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U의 Information Center를 한국에 유치하여,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인 EU 소개, 한국과 EU의 과학자 및 연구 기관간의 미팅 및 매칭(Matching), 정보공유 그리고 정보 배포 등이 Information Center의 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능일 것이다. 따라서 Information Center의 한국 유치를 통해 네트워크 부재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도

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 3) EU Framework Program의 목적

회원국 대우에 의한 한국의 Framework Program 참여에 대해 제기되는 세 번째 문제는 EU Framework Program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EU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Framework Program의 근본목적이 유럽 연구영역의 강화와 통합을 위해서 운영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기본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한국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EU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성이 큰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수 없고, 대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으나 EU 측의 필요성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해야만 한다면, EU와의 네트워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3천억 원의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기술적 성과를 얻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Framework Program은 기본적으로 공동 연구팀의 구성을 통해서만 과제신청과 참여가 가능한데, 이는 전적으로 각국의 연구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EU Framework Program의 근본적인 목적이 유럽 지역의 연구기반 확대와 경쟁력 제고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EU는 Framework Program에 대한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Framework

〈그림 1〉 연구기술개발협력 유형

<b>프로젝트 결과 종류</b>	상용화 능력 (응용기술)	+(IV) 오로지 비용분배의 효과: 가장 낮은 성공잠재력	++++(I) 보완가능성을 통한 시장장점: 가장 높은 성공잠재력
	경쟁이전 (기초기술)	++(III) 낮은 시너지효과: 비용분배  대체 가능한 능력	+++(II) 보완가능성을 통한 장기적인 장점  보완 가능한 능력
		<b>파트너의 특성</b>	

자료: 산업자원부, '한독산업기술협력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김진숙 2004).

Program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을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과 비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Framework Program은 본질적으로 유럽 국가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Framework Program 자체가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비유럽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될 수는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과 참여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측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의 대상이 될 유럽지역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한 국가가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EU Framework Program이라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EU 역외국가의 경쟁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세밀한 자체 분석을 통해 EU 측과 상호 보완 가능한 과학기술 분야를 정확히 발굴해 낼 수 있다면, 양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Framework Program에 대한 정

확하고 철저한 연구 및 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과 EU의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개발 협력유형은 〈그림 1〉의 '연구기술개발 협력 유형' 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이스라엘과 한국의 비교

회원국 대우에 의해 EU Framework Program 참여할 경우에 예상되는 한국 측의 기대효과는 사실 이스라엘의 경우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며, 회원국 대우에 의한 한국의 EU Framework Program 참여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사례는 합당한 표본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EU Framework Program에 회원국 대우로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한국과 상이한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Framework Program에 회원국 대우로 참여하기 이전부터 유대인을 기반으로 한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유럽 지역에 구축되어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중동지역에 위치해 있어 유럽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유럽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지리적으로도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상호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이 얻게 될 경제 및 과학 기술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구축해 놓은 유럽 지역의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한국 역시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유럽 전역을 연결할 수 있는 폭넓고 뿌리 깊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EU 과학기술협력 협회, 한국-독일 과학기술협력 위원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1996년도에 설립된 KIST 유럽 연구소가 EU와의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산하 K-Gin EU거점 사무소도 한국과 EU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회원국 대우에 의해 EU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다면,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유럽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과 유럽의 거리가 한국과 미국과의 거리보다 먼 것도 아니다. 서울(인천공항)에서 미국 주요 도시까지의 비행시간과 서울(인천공항)에서 유럽 주요 도시까지의 비행시간은 사실 별 차이가 없다. 지역에 따라서 서로 조금 더 길리거나 덜 걸릴 뿐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한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보다 결코 가깝지 않은 미국과의 국제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지리적인 여건이 국제 공동연구 추진의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과 유럽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교류의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인 거리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Framework Program에 회원국 대우로 참여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유럽 사이에 보다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한국과 유럽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거리감은 점차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 2. EU Framework Program 회원국 대우의 의제

### 1) EU 위원회에 대한 투표권 요구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EU 과학기술협력협정 A2 FP6참여 규정과 조건 No 6', 등에 의거하여 EU 위원회에 대한 투표권은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한국 회원국 대우로 EU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EU Framework Program

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총생산(GDP/GNP)이나 교역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EU 회원국 중에서 5-6권에 해당하는 경제역량을 지니게 될 것이며, 회원국 대우로 EU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예산 분담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EU는 한국을 EU 역외국가 중 예컨대 준회원국인 이스라엘과 차별하여 5-6권의 경제규모에 합당한 규정 및 조건을 부과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EU측에 제기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표권의 확보는 EU Framework Program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 측의 이해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투표권의 확보를 통해 한국은 한국과 EU 모두에게 필요하고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지적재산권과 사업화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Information center의 한국유치

유럽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부족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Information Center의 한국 유치가 될 것이다. 사실 회원국 대우에 의한 한국의 EU Framework Program 참여가 확정될 경우, EU의 Information Center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의 과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제8차 EU Framework Program에

## 대한 준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7차 EU Framework Program은 2013년에 종결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제7차 EU Framework Program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7차 EU Framework Program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의 한국과 EU간의 관계에 대해 지금부터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제7차 EU Framework Program은 이미 세부적인 예산의 배분과 프로젝트의 범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이 회원국 대우를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제7차 EU Framework Program의 기본적 틀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회원국 자격으로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2013년 이후 시작될 예정인 제8차 EU Framework Program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회원국 대우로 참여하게 될 제7차 EU Framework Program을 통해 본격적인 참여가 예상되는 제8차 EU Framework Program을 준비해야 한다.

## 4) 협상전략의 수립

회원국 대우에 의한 Framework Program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의 부족일 것이다. 유럽과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사안도 역시 유럽권 학위취득자의 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EU와 제7차 Framework Program

의 틀 내에서의 단계별 정책협조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EU와의 과학기술협력 로드맵의 작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먼저 EU와의 과학기술협력 로드맵 작성을 통해 EU와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특정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나 중국과 차별하여 EU에 제안할 수 있는 기술협력 분야는 무엇이며, 한국이 EU와의 공동연구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가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한국과 EU간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7차 Framework Program의 예산은 협력(Cooperation) 분야에 324억 유로, 창의(Idea) 부문에 75억 유로, 인력(People) 부문에 47억 유로 그리고 역량(Capacities) 부문에 42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고, 이밖에 원자력/핵융합 분야에 27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 이중에서 한국과 EU의 협력 제1단계는 인력(People)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Marie

Curie Actions를 통한 한국 EU간 연구인력 양성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협력의 제2단계로서 역량(Capacities) 부문에 있어서의 교류가 확대되어 상호간의 연구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3단계인 협력(Cooperation) 부문에 있어서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서 한국과 EU 사이의 국제공동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3. 결론

회원국 대우에 의한 한국의 EU Framework Program 참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원국 대우에 의한 한국의 EU Framework Program 참여는 한국 연구기반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의 노력이 미래의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